통합 개혁신당 11일만에 좌초… 새미래, 신당 통합 철회 공식화

이낙연 "새로운미래로 복귀… 진짜 민주당 세울 것"

"당 재정비하고 선거체제 신속히 갖출 것"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새미래)와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의 통합이 11일 만에 좌초됐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고 신당 통합 철회를 공식선언했다. 그러면서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며 "부실한 통합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당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해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지만 여러 문제에 부닥쳤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 등을 겨냥해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통합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며 "2월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며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다"고 부연했다. 또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구도를 깨고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겠다"며 "기득권 정당의 투쟁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견제도, 정권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며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다"며 "총선에 매진하고,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며 "국민과 당원이 겪는 오늘의 실망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새미래 공동대표는 질의응답에서 통합신당이 좌초되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주도권 다툼이란 보도는 완전히 부당하다"며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이준석 측이) 하자는대로 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 오게 된 건 '이낙연 대표가 의사결정을 안해줘서'라고 논리를 만들어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걸림돌이라고 얘기한 건 딱 두가지다. 하나는 정부조직법 문제하고 당로고 색 문제"라고 말했다.

이낙연(사진 오른쪽)·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부실한 통합결정이 부끄러운 결말… 민주주의 정신 훼손
> 극복하려던 낙인·혐오·배제의 정치 답습… 초심으로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이럴수록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언제 할 수 있겠냐'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로고 색 문제는, 합의할 때 신당 이름을 개혁신당으로 결정했는데 당색을 주황색으로 한다는 얘기가 통합 협상에서 나왔겠나"며 "불가능하다. 전혀 거론 안됐다"고 부인했다.

이어 "이후 실무자들이 당색 그대로 가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이비색을 좀 더해서 멋있게 업그레이드 하잔 실무자 의견이 있었고, 이걸 최고위에서 갑론을박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해서 넘어갔다"며 "그걸로 비효율적 얘기를 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지휘권 위임 문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지휘권을 다 달라, 공천권은 김종인 전 대표에게 주자고 했다"며 "그럼 이낙연 대표는 집에 가란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이낙연을 지지해서 참여한 12만 당원과 더불어민주당을 이탈한 제3지대를 바라는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투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게 통합신당이 맞나.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 아닌가"라며 "주도권 권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같이 한다는 것(모습)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선거운동 지휘권, 공천권 다 내놓고 국민에게 통합이라 말하면 이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가 전날 이후 이낙연 측에 직접 연락 한 번 없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는 "제게 온 건 없다"고 했고, 김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한 것은 아니고 이원욱 의원과 통화하긴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그 통화(이원욱 통화)가 '통합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용이라고 본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께 별로 정직하지 않은 자세"라며 "근본적으로 통합 정신 깨는 것에 대해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실수였으면 실수, 아니면 생각이 잘못됐으면 고치겠다는 자세 없이 이런 보여주는 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런 것 이상의 의미있는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향후 통합 재논의 없이 현 체제로 총선을 대비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일련의 사태들을 '이준석 사당화'라며 "어떤 개인의 사당화는 제3지대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는 기득권 정치, 패권정치, 사당화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저희는 형태가 어떻든 민주정치의 제3지대의 길을 가겠다는 점에 변화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3선 도전' 민주 김성주 의원 '역사도시 전주' 공약 발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총선 전주·전북 제3호 공약으로 '경주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 전주'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출마 선언과 함께 발표한 '전주를 바꾸는 도심 철도 지하화'와 15일 발표한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 전북'에 이은 세 번째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의 법적인 근거를 만든 김성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전주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함으로써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고도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후백제 복원과 역사도시 관련 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의원은 고도 지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주에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한문화원형 콘텐츠 체험관과 연계한 후백제 컨텐츠 개발이라는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는 고도 지정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 후백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주의 역사 문화자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기틀을 다져나가겠다"면서 "전주를 경주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민주 황현선 예비후보 반려인구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예비후보(전주병)가 '전주 반려동물 복합테마파크 조성'과 '전주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이는 황 예비후보의 '어디에도 없는 선(善)한 케어' 반려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공약이다.

황 예비후보는 "천만을 넘은 반려동물 인구의 급증으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전주시가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꼽히고 있지만 정책사업을 확충해야 할 시기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공공센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 지역 내 쾌적한 자연환경과 넓은 수용성을 갖춘 혁신동 일원에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했다.

전주IC, 서전주IC 등 접근성과 높은 인구밀도,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등 인근 연관 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시설 위주의 테마파크가 아닌 유기동물 복지, 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복합된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산업의 가파른 성장으로 그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민간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특화관광사업과 연계, 전북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전주유기동물재활센터를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전주동물복지지원센터'으로 확대·개편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가칭)전주동물보호지원센터는 유기동물 보호·입양의 역할과 교육 및 반려동물에 필요한 시설과 기능을 확대해 '반려동물 안심전주' 조성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동물 산책 시민 자원봉사 및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련 직업교육과 일상적인 반려 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인식 바꾸기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의회와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전북자치도의회, 美 워싱턴주의회와 상호 교류협력 확대

의회 운영·환경·농업·산업경제·문화·건설 등 분야 교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의회와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 중인 국주영은 의장과 이정린·김만기 부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19일 미국 올림피아에 위치한 워싱턴주의회 의사당에서 데니 헥 부지사와 크리스 길던 상원의원, 신디 류 하원의원 일행을 차례로 만나 전북자치도와 미국 워싱턴주 양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의회는 앞으로 공식 대표단을 상호 초청해 의회운영과 환경·농업·산업경제·문화·건설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5월,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의 도의회 방문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8개월 동안 협약 의제와 일정 등이 조율된 결과이다.

특히 워싱턴주의회는 이날 상원 회의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의 우호협력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양 의회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함께 기념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자치도의회는 이번 미국 워싱턴주의회와의 우호협력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 편중된 국제교류 지역을 확장, 보다 다양한 지역의 정책 및 흐름을 공유하게 됐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 대표단은 워싱턴주의회와의 우호협력 체결에 이어 KO-AM(Korean-American) TV에 출연해 한인 동포들에게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알렸다. 이어 20일(미 현지시간)에는 주시애틀 총영사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윤정훈 자치도의원, 2024년 사방사업 추진 계획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0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 '2024년도 사방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빈도가 더해짐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사방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터전을 조성하고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 측에 태풍 등으로 계곡침식과 토석류 유출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4일 이뤄진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일원 사방사업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김재훈 기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맞손'

전북자치도, 재생의료진흥재단 등과 협약 체결
바이오 특화단지 위한 공동사업 발굴·연계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의료진흥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생의료진흥재단은 지난 2021년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기술 진흥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R&D) 관리, 정책·제도 지원, 인력양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첨단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원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이 손을 맞잡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권덕철 전북대학교 석좌교수와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가 참석해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협력 추진 △바이오분야 연구개발(R&D)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바이오 분야 동향,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자료 및 조성 교환 △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등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도에 큰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첨단재생의료기술 분야 협업을 기대하고 있으며, 재생의료를 포함한 바이오산업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4년 업무보고 청취

지난 20일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제304회 임시회가 개회되었다.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조규철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선덕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등의 20여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실관과소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군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특색있는 업무 발굴과 국가 인구정책에 대한 발빠른 대응 등 고창군 인구정책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오는 3월 15일부터 진행되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무엇보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리 향상과 영농철을 앞두고 우리 군민들이 영농 준비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배수로 정비 등 영농 관련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